

공 개



의안번호	제 45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2. 22. (제 23 차)

의  
결  
사  
항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에 대한  
재심 처리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2. 22.

## 1. 의결주문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의 재심 신청에 대한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받은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이 동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의 설치 제한) 제1항 위반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받은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 제재조치를 변경(직무정지 1월 상당 → 문책경고 상당)할 이유가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sup>\*</sup>로 새로이 조치하기 위해 당초 제재조치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취소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치사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의2호)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치 예정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4차 제재심의위원회(2021.10.14.) 심의필
- 제2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1.12.17.) 심의필

<별지>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2020.7.8.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유진저축은행 前 ○○○○ ○○○ (이하 '신청인')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통보' 조치를 취소함

제재대상자	당초 제재조치일 (금융위 의결일)	당초 제재조치 내용	재심 처리안
前 ○○○○ ○○○	2020.7.22. (2020.7.8.)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1월 상당)	당초 제재조치의 취소*

\*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로 재조치 예정이며, 재조치는 당초 제재조치 시점부터 효력 발생

## 2. 조치사유

- ☐ 검찰 처분의 효력,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그간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인가 실무, 법문언 및 법원의 판례, 본건 임차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건 임차 사무공간은 상호저축은행 사무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제1항의 '지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당초 제재조치를 감경\*(직무정지 1월 상당 → 문책경고 상당)할 이유가 있으므로,

\* 감경사유 : ① 위규행위가 본점과 동일한 영업구역내에서 이루어진 점, ② 금융위원회가 현장 건의사항을 통해 본점의 확장범위 판단 세부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점, ③ 일부 위규행위가 상당기간 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

- 신청인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로 새로이 조치하기 위해 당초 제재조치를 취소함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조치사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7의2호)으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치 예정

## 관 계 법 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內·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생략)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생략)

<별표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5.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제3호·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7. (생략)

17의2.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7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4조(기관 및 임원제재의 가중) ⑤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1조(이의신청) ⑪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제3자에 대한 동일한 쟁점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원의 무죄 또는 취소판결 등에서 그 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재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정 제37조 제5항에 준하여 재심의한다.

⑫ 제재실시부서장은 제1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마다 처리 경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1	02-3145-7385